

## [ 오피니언 ]

## 데스크시각

기현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광주·전남 경제에는 나쁠 것 없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가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며 ‘수도권 프렌들리’에 매달리는 정부정책에 총 공세를 펴놓고 있는 터에 느닷없는 혀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 황당함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진하는 정부 당국자의 광주·전남 지역민 설득용 멘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정책연구과제 자료에 따른 분석이다.

## 첨단기업 광주·전남 미미

이 자료에서는 25개 첨단 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생산액은 88조3천 963억원, 부가가치는 35조7천492억원이

감소하는 등 비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그 자료는 광주·전남에 대해 분명 그렇게 밝혔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광주·전남 지역 경제

## 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의 비중이 미미해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더라도 피해가 타지역에 비해 적을 것이다라는 자조적 표현이었다. 고쳐쓰면 ‘수도권 규제를 풀더라도 광주·전남경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의미다.

지난 2006년 광주·전남지역 25개 업종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유형 고정자산, 생산액, 부가가치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광주는 1.1~2.3%에 그쳤으며 전남은 이보다 낮은 0.8~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지역기업의 낙후와 취약성을 모른바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더욱이 과거와 현재도 그렇지만 이

들 업종이 점단산업인만큼 광주·전남은 미래에도 먹고 살 것이 없다는 사실과 다름없다. 지역으로선 정말 큰일이다.

굳이 지역경제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자료를 들먹일 것도 없다. 고용은 물론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까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한마디로 기업 없이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소중한 광주·전남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조라하고 심각한

도 아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오직 자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 계산해보고 결정한 것이다. 미국이 얻을 이득이 많지만,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 그 악영향이 자신들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기적 조치였다.

## 기업우대 지역문화 절실

한국경제가 죽으면 미국도 반드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있다. 세계경제가 이렇듯 유기적인데 하물며 한나라의 경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지방기업을 위한 정부의 혜생과 지원책이 급선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덧붙여 지역기업 육성에는 지역 전체가 나서야 한다. 기업은 지역경제 성장역량의 핵심이다. 민관 모두가 지역기업 활성화에 지원을 모으고 뛰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지역 경제, 시민단체와 광주상공회의소 등이 광주경제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차제에 기관 단체, 학교 등 지역의 모든 조직을 맴버링 구성체가 결성돼 기업을 우대하는 범지역적 인센티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역 기업이 번창해야 지역 서민과 영세업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다.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 시설

## ‘균형’ 빠진 지역발전법 ‘불균형’ 부추기나

정부가 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5년만에 대폭 손질한 것이다.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명칭이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법에서 ‘균형’이란 단어가 빠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는 ‘균형’보다는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간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새 발전전략의 핵심은 ‘5+2 광역경제권’이다. 광역경제권 별로 선도산업을 육성해 국가의 발전을 이끈다는 것이다. 말로는 그럴듯 하지만 균형발전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수도권이 인구와 자본, 산업 등 국가자원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 위험수위 넘은 사이버 폭력 뿌리 뽑아야

힘든 고통과 불행에 안겨주게 된다. 텔런트 최진실씨 사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사이버 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서졌다. 광주YWCA가 지난달 광주시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7명이 ‘악플’을 경험했거나 직접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악플’이 유명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에도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사이버 폭력은 ‘얼굴 없는’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명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정부는 위험수위를 넘어서 사이버 폭력을 극복해야 한다. 일회성 단속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선물 달기’ 캠페인과 함께 포털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쌀 직불금 과동의 후폭풍 때문에 일까. 명작 ‘토지’와 ‘암태도’가 뇌리를 스친다. 섬진강 하구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평사리 최참관택 별채에 고집스럽게 앉아 있는 서희의 모습이 일상에 찌든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늘 서희의 절을 치켜주던 길상과 봉순의 모습도 아련하다.

평상은 아프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억척스럽다. 착한 월선이를, 천한 신분 때문에 떠나보내 고 울부짖는 용이 마음. 육망으로 둘러쳐 진 콘크리트 세상에 살면 살수록, 거칠지 만 정직함이 있어 안온한 저 뿌리 같은 땅은 그림이 되는 모양이다.

절경의 삼 암태도는 일제 강점기 소작쟁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채 오늘도 말없이 그 땅을 지키고 있다. 관습으로 내려오던 영구 소작권을 1년으로 정하면서 일본인과 지주, 그리고 소작농 사이에 벌어지는 암투. 그로인한 농민봉기가 85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평은 그렇게 늘 정직을 일깨워왔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땅을 어김없이

토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시골마다

필자에 조문을 간 적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배비’의 인기가 끊임없다. 하지만 문제는 ‘배비’의 인기가 진정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실제로 수년 전부터 클래식 음반시장은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 다시 했다. 예전에 필자는 몸담았던 클래식음악 전문지도 경영난을 뒤이겨 한동안 그 외 몇몇 클래식 전문지들도 이미 문을 닫거나 유사 관련 잡지로 외양을 바꾸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사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간에, 그것도 클래식 음악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니 클래식업계의 흥망을 짚기 시작된다. 물론 전통적인 드라마들의 고질 수법인 주인공간 러브라인에 대한 우려도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왔고, 선곡된 음악들도 아직까지는 적절하고 페 다양하다. 끝까지 고전음악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배비’가 종영된다면 필자는 그 어떤 감동적인 공연에서도 더 길고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문화평론가·2005년 11월 수상자〉

## 고인 추모하는 장례식 체면치레용 변질 안타까워

최근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간 적이 있다. 필자가 조문을 간 바로 옆 빈소에는 상주가 고위공직에 있었던지 조화가 즐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화가 넘쳐 현관으로까지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조화를 담당하던 사람에게 “조화가 너무 많아 밑으로 내놔야 하는데 어떤 걸 빼낼까요?”라고 물어 상주의 “내가 골라줄께”라며 몇 개를 쓰아냈다.

상주는 먼저 들어온 순서로 빼내는 게 아니라 조화에 달린 리본을 보면서 골랐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보낸

조화를 고른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쓰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조문은 마음은 다 똑같은데 사회적 지위에 따라 조화조차 차별을 받는다니.. 우리의 장례문화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체면 치레용으로 변질됐는지 알 수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조화가 조문객을 먼저 맞이하고 조화의 수에 따라 상주의 사회적 지위가 가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장례식이 상주나 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뽐내는 자리가 아닌, 고인을 추모하는 엄숙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농수산물 유통공사 조사에서 농·축산물 가격 중 농가 뜻은 44%인 반면 나머지 56%는 유통 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이익 중 절반 이상이 엄뚱하게도 유통과 판매 업자들에게 돌아간다니 너무 속상하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잘못돼 있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물을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에게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도심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도 절실히.

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농축산물은 생활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왜곡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 유통마진을 줄이면 그만큼 가격이 싸지고, 싸진 만큼 중국산에 손이 덜 가 우리 농산물의 판매도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정부는 지금 즉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단계별로 감시 감독해서 유통마진을 최소화 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도심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도 절실히.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 농산물 가격 왜곡하는 유통마진 최소화를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사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문화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친 부 2200-536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총보국 2200-54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